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9월 4일 이영우 의원의 20인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9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년 9월 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이영우 의원)

□ 제안이유

- 정부가 국민 여론과 자치단체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수도이전 정책을 추진해 국가 장래는 물론 국론 분열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즉흥적으로 급조된 현재의 수도이전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
- 지금 정부의 수도이전 추진에 따라 새로운 지역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인한 건전하고도 생산적인 근로의욕의 저하와 한탕주의식 풍조의 만연등 국론 분열과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바,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정부의 비민주적인 수도이전 계획에 강력히 규탄하며 확고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국민의 합의없이 즉흥적으로 급조된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통일시대와 동북아 중심 국가시대에 역행하는 수도이전을 결사반대 한다.
-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국민을

호도하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 분권을 강력 하게 추진하라.

- 막대한 수도이전 비용을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투입하고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지역갈등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천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3.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4. 심사결과

○ 원안 의결

5. 소수의견의 요지

- 중앙부처에서 하는 국가정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찬성, 반대 의견을 논의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할것임.
-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는 것이적정치 않으며 찬성하는 의원들의 의견은 없겠지만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들의 의견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함.
- 동 결의안이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대외적으로 발표할때에는 발표하는 대표 의원외 몇 명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봄.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

의안 번호	제294호
의결 년월일	2004. 9. 9 (제114회)

제안년월일 : 2004년 9월 4일
제안자 : 이영우 의원 등 21인

1. 주 문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범국가적, 역사적 국책사업인 행정수도이전을 현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며 수도는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민족적 통합을 상징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부합되도록 국민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해야 마땅하므로 행정수도이전 계획 추진을 즉각 중지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 가. 국민의 합의 없이 즉흥적으로 급조된 행정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나. 통일시대와 동북아 중심 국가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수도이전을 결사반대 한다.
- 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국민을 호도하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 라. 막대한 행정수도이전 비용을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투입하고 행정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마. 지역갈등과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천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제안이유

- 정부가 국민 여론과 자치단체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수도이전 정책을 추진해 국가 장래는 물론 국론 분열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즉흥적으로 급조된 현재의 수도 이전 계획은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
- 지금 정부의 수도 이전 추진에 따라 새로운 지역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인한 건전하고도 생산적인 근로의욕의 저하와 한탕주의식 풍조의 만연 등 국론 분열과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바,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정부의 비민주적인 수도 이전 계획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확고한 반대 의지를 표명 하고자 함.

※ 이송처 : 청와대, 국회,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경기도, 부천시

붙 임 : 행정수도이전반대 결의문(안) 1 부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문(안)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범국가적, 역사적 국책사업인 행정수도 이전을 현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며 수도는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민족적 통합을 상징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부합되도록 국민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해야 마땅하므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 추진을 즉각 중지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민의 합의없이 즉흥적으로 급조된 행정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행정수도이전은 국가의 중대사인 국책사업으로서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기 전에 국민투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통일시대와 동북아 중심 국가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수도이전을 결사반대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역사, 등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지인 수도권권을 버려두고 남행천도는 통일의지의 후퇴를 초래하는 처사이다.
3.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국민을 호도하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실질적인 지방자치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여 지방 활성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4. 막대한 행정수도이전 비용을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투입하고 행정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수도이전비용을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쏟아 부어 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대책부터 수립하라.

5. 지역갈등과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천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충청권을 포함한 확대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으로 새로운 지역갈등이 유발될 것이며,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켜 신행정수도건설에 본래 목적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2004. 9. 9.

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동